

제2부

심의 · 의결현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장 심의개요

제2장 심의 · 의결현황 및 분석

제 1 장

심의개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운영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사과문게재’ 결정은 선거법상 규정돼 있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 중의 하나이지만, 사과문게재 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정보도문게재’ 결정은 양 당사자의 제출 자료나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사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왜곡되고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경우 결정하도록 했다.

‘반론보도문게재’ 결정은 정정보도문게재 결정과는 달리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았으나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사하기로 했다.

‘경고문게재’ 결정은 동일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거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 특정 후보를 부각 보도함으로써 불공정성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리기로 했다.

‘경고’ 결정은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보도하거나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광고 게재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의’, ‘권고’ 결정은 비록 기사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긴 하나 의도성이 거의 없거나 위반 수위가 미약한 경우 경중을 따져서 내리도록 했다.

제 2 장

심의 · 의결현황 및 분석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기사심의는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심의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I. 심의 · 의결 현황

1. 자체심의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심의실무 팀에서 대상매체(중앙일간지 31종, 지역일간지 100종, 종합주간지 34종, 교육주간지 13종, 지역주간지 230종, 월간지 36종, 뉴스통신 2종 등 446종)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 ·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교육 관련 매체를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해 160건의 자체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160건 중 경고가 91건(56.9%)로 가장 많았고, 주의 45건(28.1%), 권고 16건(10.0%) 그리고 경고문 게재 결정 8건(5.0%)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100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32건(20.0%),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24건(15.0%)이었다.

자체심의 회차별 의결현황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2차	28	28						6	16	6
3차	28	20	2			6		8	12	8
4차	17	7	5			5		10	7	
5차	24	8	2		3	11		19	4	1
6차	4	3				1	1	2		1
7차	9	6	1			2		9		
8차	9	4	1			4		8	1	
9차	5	3	2					2	3	
10차	7	4	2			1		6	1	
11차	16	10	4		1	1	4	12		
12차										
13차	6	2	4				1	5		
14차	4	2	1			1	2	2		
15차	3	3						2	1	
총 계	160	100	24		4	32	8	91	45	16
	100.0%	62.5%	15.0%		2.5%	20.0%	5.0%	56.9%	28.1%	10.0%

각 매체 유형별 의결현황을 보면, 일간지는 112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중앙종합일간지는 10건, 지역종합일간지는 92건, 일반경제지 4건 그리고 스포츠지와 무료일간지가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3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22건(19.6%),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16건(14.3%)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일간지의 경우 외부기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21건으로 타 매체 유형보다 많은 제재를 받았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가 56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9건(34.8%), 권고 11건(9.8%) 그리고 경고문게재결정이 6건(5.4%)으로 나타났다.

주간지는 40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종합주간지는 16건, 지역주간지는 24건의 제재를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형평성 위반이 21건(52.5%), 외부기고 9건(22.5%), 여론조사보도요건미비 7건(17.5%), 광고제한 3건(7.5%)이다. 특히 지역주간지 또한 지역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외부기고로 인한 제재(6건, 25%)가 많았다. 결

정내용별로는 경고가 28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와 권고가 각각 5건(12.5%) 그리고 경고문게재가 2건(5.0%)으로 나타났다.

월간지는 7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형평성 위반으로 6건, 외부기고 1건이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 6건, 주의 1건으로 나타났다. 뉴스통신은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1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자체심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1건으로 기각되었다.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의결현황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일간지	중 앙	20	11	8		1		9	6	5
	지 역	92	62	8		1	21	6	47	33
종합주간지	16	7	6			3		11	4	1
지역주간지	24	14	1		3	6	2	17	1	4
월 간 지	7	6				1		6	1	
뉴 스 통 신	1		1					1		
총 계	160	100	24		4	32	8	91	45	16
	100.0%	62.5%	15.0%		2.5%	20.0%	5.0%	56.9%	28.1%	10.0%

2. 시정요구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18건으로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7건, 지역주간지 8건, 월간지 및 뉴스통신이 각각 1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들은 후 안건을 심의, 결정했으며, 처리결과는 정정보도문 게재 2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건, 경고문게재 4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권고 1건, 기각 4건, 각하 1건이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4건으로 2건은 기각되었으며, 2건은 인용결정을 내렸다. 인용결정 중 일부인용은 1건, 원심 취소는 1건이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사건은 한건도 없었다.

시정요구심의 처리현황

구 분 간 별 계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사과문 게재 등	경고문 게재 등	정정보도 게재 등	정정보도 게재결정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결정	경고문 게재결정	반론보도 게재결정	권고	기각	각하
일간지	중 앙	1		1						1	
	지 방	7	1	1	5	1		4	1	1	
지역주간지		8	2	2	4	2	1	3		1	1
지역월간지		1		1						1	
뉴 스 통 신		1	1				1				
총 계	18	4	3	11	2	2	4	4	1	4	1
	100.0%	22.2%	16.7%	61.1%	11.1%	11.1%	22.2%	22.2%	5.6%	22.2%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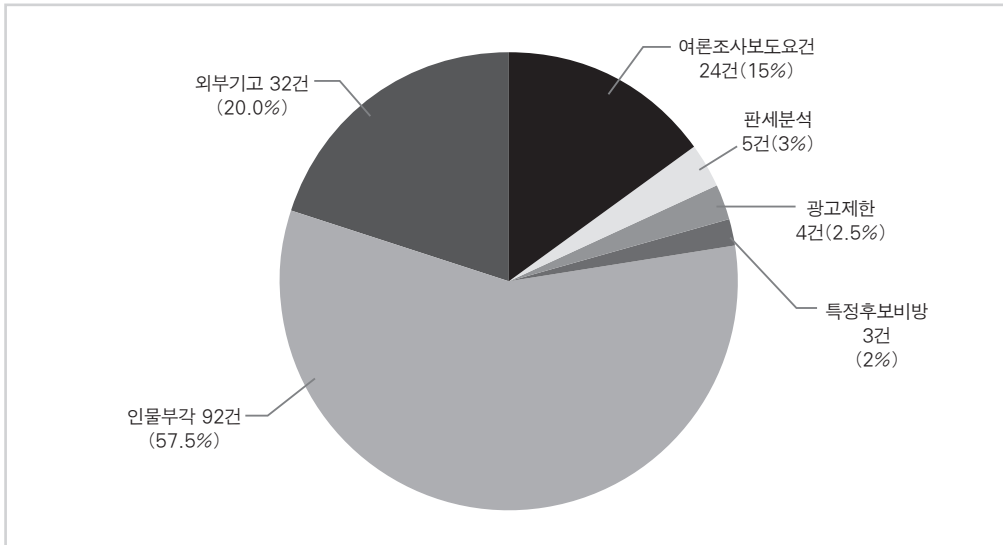
II. 자체심의 분석

1. 위반유형별 분석

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해 제재조치를 한 선거기사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부기고와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기간 중 특이한 점은 선거기간 초반에는 현직 지자체장을 부각시키는 홍보성 기사에 대해 많은 제재가 내려졌으며,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 공표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 제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할 경우 제재를 했으며 선거에 임박할수록 제재 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해 제재를 받은 언론사도 있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해 의결한 총 160건을 위반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00건(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 칼럼 등 외부기고가 32건(20.0%),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24건(15.0%), 광고제한 위반이 4건(2.5%)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들을 세분해 살펴보면 인물부각이 92건, 판세분석이 5건, 특정 후보 비방기사가 3건이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1) 인물 부각

선거기사 중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유형은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기사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지자체장의 실적과 성과를 부각하는 홍보성 기사와 인터뷰 기사가 많았다. 이 기사들은 대부분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지나치게 우호적인 표현과 성과를 과장해 보도함으로써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당간 경합이 치열했던 수도권과 충청지역 후보에 대한 부각기사가 많았다.

일부 언론사들은 특정 후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가 있음에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제재를 받았다. 이들 매체에 대해서는 경고문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특정 후보를 부각 보도해 제재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데일리스포츠월드는 2010년 2월 4일자 20면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비법”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모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보도하면서 인물사진을 지나치게 크게 부각하고 구정활동의 성과 및 자질과 능력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역일간지인 호남매일은 2010년 5월 4일자 7면 “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

점 ‘화제’” 제하의 기사에서 여성 최초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며 주요 공약과 경력 등을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는 광주 5명, 전남 6명임에도 여성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인물부각 기사 중 특정 후보의 활동만을 수 차례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다. 전남지역 지역주간지인 강진고을은 군수로 출마한 현 군수의 동향 및 실적을 다룬 기사와 인터뷰를 인물 사진과 함께 3주에 걸쳐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했으며, 같은 지역주간지인 나주투데이도 특정 후보예정자의 이력과 활동사항을 다수의 사진과 함께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했을 뿐 아니라 이 후보의 출마관련 기사와 칼럼을 수차례 호의적으로 보도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충청지역일간지인 대전일보, 충남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는 특별히 인터뷰를 할 계기가 없음에도 특정 도의원 후보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했으며, 인터뷰 내용도 후보자의 학력, 경력, 정치철학, 인맥 등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다뤄 그 정도에 따라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동일한 후보에 대한 부각 기사라도 게재 시점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무료일간지인 데일리노컷뉴스와 더데일리포커스 그리고 시사주간지인 시사저널에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인물부각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게재시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반면, 동일 인물에 대한 부각 기사를 게재한 지역일간지인 중부일보와 우리일보에 대해서는 선거가 임박한 때임을 감안, ‘경고’ 결정을 내렸다.

(2) 판세분석

선거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과 지지율 등을 분석하는 판세분석은 부동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선택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대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찍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정당 자체분석, 정밀취재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판세분석 보도를 해야 한다.

판세분석 보도 형태는 주로 경마식 보도로 나타나는데, 이번 지방선거 선거보도에서도 특정 후보가 유력하다거나 특정정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판세를 분석하며 제목과 본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우세나 열세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5건의 보도에 대해 제재를 했다. 5건 중 지역일

간지가 4건, 중앙일간지가 1건이고, 결정 유형별로는 경고문게재 1건, 경고 1건, 주의 2건, 권고 1건이다.

충청일보는 선거를 앞둔 5월 25일자 1면과 5면에 각각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황금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세를 분석하며 제목에서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단정 보도했으나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외로 큰 격차가 없고, 대전시장의 경우 기사 본문에 여론조사 결과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날 5면에 충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올해 25차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며 정우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4번 1위를 차지했음을 근거로 ‘압도적 1위’라고 보도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우택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위원회는 판단했다. 두 건의 기사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경고문게재’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투데이는 2010년 2월 2일자 5면 “요동치는 충청권 판세는? 수도권 단체장 판세는?” 제하의 기사에서 수도권 및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제목과 사진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들을 유력후보라고 부각 보도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광주일보는 2010년 2월 8일자 5면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제하의 기사에서 제목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정당 소속 후보예정자들만 소개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헤럴드경제는 2010년 5월 3일자 5면 “텃밭제외 표심 ‘예측불허’… 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제하의 기사와 도표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각 정당별 판세를 분석했고, 도표(경남도지사)에는 기사내용과 달리 특정 정당이 우세한 것으로 표기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3) 비방기사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상대 후보를 폄훼하거나 불리하게 보도해 제재를 받은 기사는 3건이다. 3건 모두 ‘경고’ 결정을 받았으며, 2건은 지역일간지이고 1건은 지역주간지이다.

아시아일보는 2010년 4월 14일자 7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 포천

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제하의 칼럼에서 현직 시장을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
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평가를 전하면서 해당 후보예정자를 비방해 ‘경
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역 주간지인 강남내일신문은 2010년 4월 8일자 1면 “강남을 뚫로보고 60살
넘은 여성후보야”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후보예정자에 대해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보도
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충청일보는 2010년 4월 29일자 23면 “배신의 계절” 제하의 칼럼에서 전임 부단체
장이 선거에 출마하여 재임시 보좌하던 단체장과 경쟁하게 된 상황을 배신이라고 비방
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나. 외부기고 제한

외부기고(칼럼) 제한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선거기사관련 위
반사항으로, 이번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32건의 기사에 대해 자체심의 의결했다. 매
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일간지가 2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역주간지가 6건,
중앙일간지와 월간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결정유형별로는 경고가 28건으로 가장 많
았고 권고가 2건, 경고문게재와 주의가 각각 1건이었다.

외부기고 금지는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나뉜다. 우선 선거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두 번
째로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건
이다. 영남일보는 2010년 3월 2일자 13면 “인사발령” 제하의 외부 기고문을 게재하
면서 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게재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인천신문은 2010년 4월 20일자 15면 “두 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
콧” 제하의 외부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인천시장 후보예정자 두 명의 환경정책 및 도덕
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도덕성이 뒤떨어진다고 해 ‘주의’ 조치했다.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해 제재를 받은 것은 30건이다. 이 중 심의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예정자가 칼럼을 게재할 경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약한 점을
감안해 낮은 수위의 제재를 했다. 새만금일보 2010년 4월 2일자 15면 “따뜻한 카리
스마” 제하 칼럼의 경우 ‘권고’ 조치했는데, 이 칼럼은 전주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예정자가 작성한 것이다.

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 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실효성에 대해 정치계·학계·언론계 등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 여론조사 및 그 보도 형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에서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다만 여론조사 보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도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4건이다. 경고 결정이 가장 많은 14건이고 주의가 9건, 권고가 1건이다. 여론조사 보도 공표요건 미준수로 제재를 받은 매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가 8건, 지역일간지가 8건, 시사주간신문은 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언론사명이나 조사일시 등을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4일자 13면 “한나라 8, 민주 3 선진 1곳 우세… 4곳은 혼전” 제하의 기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를 실시한 언론사명과 게재일자 등 출처를 밝히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겨레는 2010년 5월 11일자 15면 “진보후보 약진 … 보수후보들 단일화 변수” 제하의 기사에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출처 및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타 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할 경우 인용 매체의 보도일자 및 매체명을 밝혀 독자들이 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라. 광고제한

선거기사심의기준과 공직선거법은 언론사의 의견광고와 상업광고의 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언론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되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고제한을 위반한 건수는 총 4건으로 지역일

간지 1건, 지역주간지 3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 조치했다.

4건 가운데 3건은 선거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명서 발표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의견을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 게재지면의 위치와 무관하게 이를 의견광고로 판단했다. 거창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지인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보, 한국시사는 특정인의 거창군수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일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전재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대구일보는 2010년 5월 10일자 2면 광고란 ‘부고’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모친상을 알리는 부고 광고를 게재하면서 후보자의 성명, 경력을 부각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2. 결정내용별 분석

가. 경고문 게재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총 8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지역일간지가 6건, 지역주간지가 2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건, 외부기고 위반이 1건이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선거기사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인 ‘경고문게재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된 선거 기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월간지의 경우 선거가 끝난 뒤에 발행이 될 경우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고결정문 게재 유형을 세분화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을 하도록 했다. 위반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해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원 보도의 게재지면과 관계없이 1면 우측 상단에 굵은 글씨체로 게재 하도록 했으며, 수위에 따라 그 게재문 형식과 지면을 다르게 하도록 했다.

경고문게재 결정 8건 중 중급 정도 제재를 받은 것은 2건이며, 나머지 6건은 낮은 수위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08	나주투데이	2010.3.1. 2010.3.8. 2010.3.15. 2010.3.22. 2010.3.22.	1 6 1 1, 4 6	신 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상실 김노금이 함께 하는 세상 이야기-나주의 미래 어디로 흘러가나 주향득 나주시장 후보추대위 후보수락 촉구 주향득 나주시장 출마 공식선언/주향득 그녀는 누구인가 김노금이 함께 하는 세상 이야기-나주의 여성 정치인들
2010지선152	호남매일	2010.5.4.	7	천밀한 '엄마교육감 후보' 홍일점 '화제'
2010지선153	호남신문	2010.4.20.	9	"힘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될 때 광주가 살아납니다"
2010지선154	호남신문	2010.4.19. 2010.4.28. 2010.4.30.	1 1 1	"잘사는 장성의 미래 책임지겠다" 모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어르신, 노후 편안할 권리 있다
2010지선156	강진고를	2010.4.21. 2010.4.28. 2010.5.5.	1 23 1, 3	"황주홍식 교육실험" 대성공 '깨끗하고 똑똑한 황주홍' 외연확대에 성공 "당 보다는 사람 선택을" / "민생을 최우선으로 행기는 군수 되겠다"
2010지선169	충청일보	2010.5.25	1 5	염홍철·정우택·안희정 '황금분할'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2010지선176	내외일보	2010.5.6. 2010.5.10.	6 8	양태홍 구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 정책연구팀 구성" 양태홍 예비후보, "지역쿼터제 도입"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77	우리일보	2010.5.26	14	인천시장 후보 '4자 방송토론 무산' 은 거대정당의 횡포 무상급식 tv토론기획 박탈

나. 경 고

자체심의로 의결한 160건 중 경고 결정은 91건으로 56.9%를 차지했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9건, 지역일간지 47건, 지역주간지 17건, 종합주간지 11건, 월간지 6건, 뉴스통신 1건이다. 중앙일간지에 대한 제재 9건 중 5건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반면, 지역일간지의 경우 인물부각으로 제재를 받은 건이 총 47건 중 2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의 위반 유형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신문들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현직 지자체장들이나 후보를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앙일간지의 경우 전국 판세 분석 기사를 게재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일간지의 경우 후보자 칼럼 게재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신문제작진들이 선거법이나 심의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의 경우 후보자 칼럼 게재로 4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경고결정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45건, 외부기고 28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14건, 광고제한 4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45건 중 41건은 인물부각으로 경고 결정을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4	뉴스저널	2월호	108~109	강한 추진력의 서울 시민 참 대변인 실물경제 전문성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끌어
2010지선5	시사매거진	2월호	38~39	젊은 정치리더, 변화와 변혁의 중심에 서다
2010지선6	데일리포츠헤드	2010. 2. 4.	20	행정 달인이 말하는 '행복 해법'
2010지선7	중앙매일	2010. 2. 11. 2010. 2. 16.	16 16	지역 경제 살리기 · 신(新) 성장 동력 확충 투자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전 행정력 집중할 것"
2010지선15	전라일보	2010. 2. 11.	14	"주민 복리 · 전주발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2010지선19	대한매일신문	2010. 2. 9.	16	서민배려와 원칙이 있는 행정
2010지선32	내외일보	2010. 2. 10.	16	오원석총장,통합시동북아의성장동력만들겠다 "우리는두려움보다는희망이라는 가능성을 선택했다"
2010지선35	수도일보	2010. 3. 8.	16	살기좋은 친환경 거주지 만들기
2010지선43	전주일보	2010. 3. 4. 2010. 3. 8.	16 16	명품 홍삼 진안 발전 힘을 더한다 차별화된 '명품홍삼' 국내시장이 좁다
2010지선62	중앙매일	2010. 3. 3.	16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건설에 최선 다할 것
2010지선63	중앙매일	2010. 3. 10.	16	대한민국 녹색섬표 관광 단양건설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행정 실천
2010지선64	중앙매일	2010. 3. 19.	16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2010년 새해설계 최승우 예산군수
2010지선66	시사매거진	3월호	32~33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힘쓸터
2010지선80	파이낸셜뉴스	2010. 3. 22.	10	삼각산, 서울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
2010지선82	대한매일신문	2010. 3. 23.	5	삼각산 애국지사 묘역, 명소될 것
2010지선84	새만금일보	2010. 3. 24.	15 16	진안군의 '우공이산' 을 기대한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는 진안 만든다!
2010지선85	전주일보	2010. 3. 22.	16	'지성감민' 시정 운영...참 공약실천 '앞장'
2010지선86	일요서울	2010. 3. 21.	12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행정 경험 행정전문가
2010지선109	중부일보	2010. 4. 2.	21	'유천호' 강화군수 출마
2010지선110	중부일보	2010. 4. 9.	21	'안상수'를 다시 공천하는 이유
2010지선114	수도권일보	2010. 4. 15.	17	"인구 50만명 도시에 걸맞는 시정 펼쳐겠다"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15	시사포커스	2010. 4. 15.	17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행정 실정 바로 잡겠다”
2010지선116	교육연합신문	2010. 3. 31.	7	‘작은 도서관’ ...지역 ‘삶의 질’ 향상의 터전
2010지선117	김천문화신문	2010. 3. 23.	2	비전, 누가 갖다주는 것 아닙니다.
2010지선118	서경신문	2010. 3. 15.	17	강석진 전 군수, 청와대 ‘특별한 선물’ 받아
2010지선119	한국시사	2010. 3. 15.	17	거창군수로 출마 예정인 강석진씨에게 청와대에서 격려의 화분이 배달되었다.
2010지선125	충남일보	2010. 4. 20.	3	“도정현안 지원에 의회가 최선 다할 것”
2010지선126	충청투데이	2010. 4. 19.	11	“도청이전 신도시 차질없이 건설 대책제전 · 대충청방문의 해 지원”
2010지선127	아시아일보	2010. 4. 14.	7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서장원 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문제 있다
2010지선128	강남내일신문	2010. 4. 8.	1	“강남을 뭘로 보고 60살 넘는 여성후보야”
2010지선136	중도일보	2010. 4. 29.	9	“도정현안 적극지원...9대의회 성공적 출범 가교 역할”
2010지선137	충청일보	2010. 4. 29.	23	배신의 계절
2010지선141	매일신문	2010. 4. 29.	4	“각종 인프라 신(新)기업정책 만족, 수도권 갈 이유 없어요” “기업이 웃어야 구미가 행복” 업체 민원 해결률 96%
2010지선142	우리일보	2010. 5. 4.	14	민선 3 · 4대 이어 5대까지 간다...안상수
2010지선143	월간중앙	5월호	288~289	강진 주민 11명 늘어어요
2010지선151	전남매일	2010. 4. 19.	10	민주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듣는다
2010지선155	일요서울	2010. 5. 2.	34	“서민과 중산층의 도시로 만들겠다”
2010지선157	전광일보	2010. 5. 10.	14	“전남교육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희망신인’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2010지선158	호남신문	2010. 5. 10.	9	“농어촌 · 중소도시 살리는 교육 이뤄내겠다”
2010지선159	시사IN	2010. 5. 8.	28~30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 그게 한명숙 전공이다
2010지선160	뉴스포스트	2010. 4. 25. 2010. 5. 9.	6~7 4~5	‘인천 바람’ 일으켜 정권 교체 이끌겠다 “쇼맨십은 이제 그만... ‘경제도지사’ 필승불패”
2010지선168	evening	2010. 5. 24.	17	정당 후보 아닌 무소속으로 평가 받겠다
2010지선178	종로저널	2010. 5. 24.	5	선거 판세는 이미 결정, 앞으로 일주일만 관건
2010지선182	월간중앙	6월호	64~68	54% 지지율 ‘훈風’ 이 부는데... 광화문광장에 앉아 청와대를 슬쩍 바라보다
2010지선183	마포타임즈	2010. 5. 19.	4	“서울교육청 청렴도 꼴지, 반드시 1위로 만들겠다!”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3	강원도민일보	2010. 3. 4.	19	속초와 동우대학이 살 길
2010지선54	새전북신문	2010. 3. 8.	11	전주 열린 시민강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2010지선55	시민일보	2010. 3. 5.	7	녹색환경 도시를 가꾸자
2010지선56	인천일보	2010. 3. 4.	16	구도심 재개발의 상생 방안
2010지선57	인천일보	2010. 3. 9.	16	다섯가지 인간의 질
2010지선67	강원일보	2010. 3. 9.	7	원주~강릉 복선전철 당장 결정하라
2010지선68	동국일보	2010. 3. 18.	15	세계와 소통하는 다보스포럼
2010지선69	대전일보	2010. 3. 9.	22	한자 교육, 문화수준과 국격 높인다
2010지선70	인천일보	2010. 3. 18.	15	인천 교육이 걱정된다
2010지선71	충청투데이	2010. 3. 12.	16	청렴은 아름다운 미래다
2010지선88	경기헤럴드	2010. 3. 18.	2	민주당은 시장출마를 포기하고 범진보 통합단일후보에 동참해야한다
2010지선92	서울신문	2010. 3. 25.	30	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2010지선93	강원도민일보	2010. 3. 22.	19	강원교육 단단하게 키우기
2010지선94	광주일보	2010. 3. 18.	17	학교 내 강압·폭력 절대 안된다
2010지선95	인천신문	2010. 3. 10.	14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
2010지선96	충북일보	2010. 3. 24.	14	세종시 해법, 오로지 원안사수뿐
2010지선97	충청투데이	2010. 3. 19.	17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우리가 주역
2010지선98	시사신문	2010. 3. 21.	5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010지선99	시사신문	2010. 3. 28.	5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2010지선100	시사포커스	2010. 3. 31.	13	시민이 잘 사는 ‘시민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010지선101	성북신문	2010. 3. 18.	3	학교 운동장 잔디운동장으로 전환해야
2010지선120	인천일보	2010. 4. 13.	17	교장공모제 확대와 부작용
2010지선121	주간 시정신문	2010. 3. 25.	15	은혜로운 언어행실
2010지선130	경북일보	2010. 4. 21.	22	발레오만도의 정상화를 바라며
2010지선131	중구신문	2010. 4. 13.	3	“건강보험공간의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2010지선132	중구자치신문	2010. 4. 14.	2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아주 좋아요!”
2010지선145	여수여수사람들	5월호	10~13 99~100	여수! 박람회 준비 이대로 좋은가 숨털보다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요!
2010지선161	강남포스트	2010. 5. 6.	3	“믿음없는 정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74	충청일보	2010. 3. 17.	7	충남도지사 가상대결서 선진당 이태복 후보 '1위'
2010지선122	주간조선	2010. 4. 12.	54~55 55~56	62 지방선거-충남지사 與 '이완구 공천' 여부 최대 변수 자유선진, 박상돈·이태복 신경전 김태환 지사 빠진 자리 예측불허 혼전 與 현명관·무소속 우근민 지지율 경쟁
2010지선124	충청일보	2010. 4. 13.	6	대전시장 '4파전' 구도 압축
2010지선146	아주경제	2010. 5. 10.	A4	홍건표 우세속 김만수 바짝 추격
2010지선147	연합뉴스	2010. 5. 10.	6.2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판 '요동'.. '돈뭉치' 파문
2010지선163	조선일보	2010. 5. 14.	A13	한나라8 민주3 선진 1곳 우세...4곳은 혼전
2010지선164	한겨레	2010. 5. 11.	15	진보후보 약진...보수후보들 단일화 변수
2010지선165	아주경제	2010. 5. 11. 2010. 5. 12.	A4 A4	한나라 수도권 우세속 충청권 '혼전' 경전철이나 9호선 연장이나
2010지선166	민주신문	2010. 5. 16.	12~13	당의 운명 걸고 선거전 스타트
2010지선170	서울신문	2010. 5. 24.	8 9	경기도정치1번지 수원 오차범위 혼전 부평·중구 초점전...與 수성 쉽지않을듯
2010지선172	세계일보	2010. 5. 20.	6	野 단일화효과 기대속 '北風' 변수
2010지선173	중앙일보	2010. 5. 25.	22	'영남=한나라, 호남=민주' 변화 바람
2010지선174	밀양사람들	2010. 5. 20.	1	후보 단일화 과정 긴박한 상황 연출 관심 높았다
2010지선179	사건의 내막	2010. 5. 30.	4 5	'충청' 안상수 맞대결 구도 '호남' 송영길 '한나라' 박성효vs '선진당' 엄홍철

광고제한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89	거창군민신문	2010. 3. 18.	2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10지선90	거창신보	2010. 3. 9.	13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10지선91	한국시사	2010. 3. 8.	14 15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안녕하십니까?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의 아들 강석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0지선162	대구일보	2010. 5. 10.	2	부고

다. 주 의

자체심의 의결 건수 중 주의 결정은 45건에 대해 내려졌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6건, 지역일간지 33건, 종합주간지 4건, 지역주간지 1건, 월간지 1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9건, 외부기고 위반 1건이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2	광주일보	2010. 2. 8.	5	민주당 공천=당선 후보 5명 각축
2010지선9	파이낸셜뉴스	2010. 2. 23.	22	"노인인력 방치 사회, 경제적 낭비"
2010지선12	데일리스포츠월드	2010. 2. 3.	14	살고싶은 도시...3년 연속 '환경대상'
2010지선13	아시아일보	2010. 2. 4.	5	구로구, 청년인턴 100% 정사원화 힘찬 '시동'
2010지선14	아시아일보	2010. 2. 18.	8, 16	한국의 알프스 양평 으뜸 생태마을 명성 드높다
2010지선16	전북일보	2010. 2. 12.	12 13	전국 제일 생활스포츠크도시, 지역발전 디딤돌로 집집마다 돈 버는 부농 꿈 실현
2010지선17	경인종합일보	2010. 2. 9.	20	다양한 인적자원 공존 시민중심 행복도시
2010지선18	경인종합일보	2010. 2. 10.	20	2010년 꿈이 실현되는 도시 Vision 남구
2010지선20	수도권일보	2010. 2. 8.	16	군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최우선
2010지선22	전국매일	2010. 2. 5.	20	새출범 통합시 '대한민국 최고 명품도시' 기대
2010지선23	전국매일	2010. 2. 11.	20	고달픈 구민이 풀하면 언제든 통화
2010지선24	전국매일	2010. 2. 19.	20	다양한 문화 혜택 균등한 복지 매진
2010지선25	중도일보	2010. 2. 5.	9	중부권 첫 슬로시티 선정, 올해 기반 조성에 심혈
2010지선26	중도일보	2010. 2. 11.	9	인구 100만 시대 대비...경제도시 건설에 매진
2010지선27	중부일보	2010. 2. 4.	17	소통과 희망으로 주민 곁에 '한 발 더...'
2010지선28	중부일보	2010. 2. 9.	12	조화로운 발전 '강화 2025 프로젝트' 시동
2010지선36	시민일보	2010. 3. 2.	20	청년인턴 참여자들 정규직 전환 '충대됐다'
2010지선37	아시아경제	2010. 2. 24.	8	경제자유구역 탄력 '부자충복' 만들겠다
2010지선38	우리일보	2010. 2. 19.	20	성동구,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
2010지선39	우리일보	2010. 2. 26.	20	꿈과 희망! 힘찬미래! 준비하는 성북구
2010지선40	인천일보	2010. 2. 25.	12	집에서 의료, 교육, 민원업무 원스톱 서비스 지능형 홈네트워킹 세상 눈앞
2010지선41	전주일보	2010. 2. 19.	16	미래 준비하는 희망도시 향해 힘찬 '날개짓'
2010지선42	전주일보	2010. 2. 24.	16	새만금 중심 관광도시 '부안시대' 개척
2010지선44	현대일보	2010. 3. 5.	4	어느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임식
2010지선45	시사뉴스	2010. 3. 15.	46~47	군민들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최우선
2010지선50	주간함양	2010. 2. 15.	6	서춘수 자서전 출간 기념식...대선 출정식 방불
2010지선51	경제풍월	3월호	64~69	공교육 활성화 길 있다
2010지선60	경기신문	2010. 3. 16.	14	글로벌 구리인이여, 세계와 호흡하라
2010지선61	일간전북타임스	2010. 3. 2.	12	세계로 뻗어가는 진안, 진안 홍삼, 중국시장 '노크'
2010지선65	충북일보	2010. 3. 11.	4	'눈치우기 달인' 남상우 시장
2010지선81	대전일보	2010. 3. 27.	5	임기 짧지만 지역현안 해결 역할 다할 것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83	새만금일보	2010. 3. 17.	16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잘사는 '주식회사 김제' 건설 올인
2010지선135	조선일보	2010. 4. 22.	E3	"자녀와 찾으면 더 유익한 과학도시" 박성효 대전시장 "청정자연 속에 편히 쉬다가세요" 정우택 충북지사
2010지선144	헤럴드경제	2010. 5. 3.	5	텃밭제의 표심 '예측불허' ...한나라 10곳 수성 최대관심
2010지선184	대한투데이	2010. 5. 31.	4	아버지는 군민을 사랑하기에 출마했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9	경북일보	2010. 2. 17.	4	예비후보자 오차범위 내 접전
2010지선72	광남일보	2010. 3. 9.	3	'수성vs탈환'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 9곳
2010지선73	전남일보	2010. 3. 17.	5	유창동, 선두 최형식 맹추격
2010지선75	일요서울	2010. 3. 7.	10	대구시장 김범일 현시장 vs 서상기 시장위원장 2파전
2010지선76	위클리경향	2010. 3. 23.	20	친이·친박 '지방선거의 결투'
2010지선102	새만금일보	2010. 3. 17.	3	오근량 예비후보 지지율 '최고'
2010지선103	월요신문	2010. 3. 21.	7	당심 바로미터 '집안(?)' 선거
2010지선138	국민일보	2010. 4. 28.	3	'친노' 김두관 단일화 경남 '대마' 이완구 불출마 충남 新격전지 반집승부?
2010지선139	동아일보	2010. 4. 28.	A8	여론조사 착시? 충북지사 사수? 수도권 기초장?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29	인천신문	2010. 4. 20.	15	두명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와 두 개의 보이콧

라. 권 고

권고 결정은 16건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5건, 지역일간지 6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3건, 외부기고 위반 2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1건이다. 권고 결정은 심의위원회 설치 초기에 주로 내려졌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1	아시아투데이	2010. 2. 2.	5	오동치는 충청권 판세는? 수도권 단체장 판세는?
2010지선3	데일리노컷뉴스	2010. 2. 4.	10	첨단·친환경-인천이 도시의 패러다임 바꿀 것
2010지선8	파이낸셜뉴스	2010. 2. 5.	15	3년간 22조 투자 유치 '자율적 노사합의 유도' 주효
2010지선10	기호일보	2010. 2. 1. 2010. 2. 4.	20 3	자연의 숨길 가득 품고 새로이 태어나는 물길 '로드맨' 이 바라보는 수원 미래상
2010지선11	동국일보	2010. 2. 11.	3	녹색의 도시 IT·명품의 도시로 비상
2010지선21	스포츠동아	2010. 2. 10.	14	"동계훈련 메카... '스포츠 도시' 발돋움"
2010지선33	더데일리포커스	2010. 2. 23.	A12	"콤팩트·스마트, 그리드가 인천 미래"
2010지선34	경기신문	2010. 2. 23.	14	살기좋은 '고품격 친환경 도시' 이끈다
2010지선46	시사저널	2010. 3. 2.	40~43	명암 갈리는 현역들의 도전 인천은 '순탄', 대전은 '가시밭' "내가 구상하고 진행해 온 사업 직접 마무리할 기회 갖고 싶다"
2010지선47	미래교육신문	2010. 2. 12.	4	"전남교육 선진화 기필코 실현할 터"
2010지선48	서해안신문	2010. 2. 11.	12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은 한편의 감동드라마
2010지선49	주간시정신문	2010. 2. 18.	20	특급 손님맞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2010지선87	강원리뷰	2010. 3. 6. 2010. 3. 19.	12~13 8~9	"2015년 인구 10만명, 영동지역의 중심도시로 비상위해 혼신의 노력다할것" "국제특구 도시 녹색성장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터"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2	영남일보	2010. 3. 2.	13	인사발령
2010지선111	새만금일보	2010. 4. 2.	15	따뜻한 카리스마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 재 면	제 목
2010지선58	세계일보	2010. 2. 22.	4	서울시장·경기지사 한나라 앞서/충남지사·대전시장 야권이 우세

3. 매체유형별 분석

제5회 지방선거 선거기사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일간, 주간, 월간으로 대별해 총 446종으로 일간지 131종(중앙지 31, 지역지 100), 종합주간지 34종, 교육주간지 13종, 지역주간지 230종, 월간지 36종, 뉴스통신 2종이었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14개, 지역일간지 46개, 종합주간지 12개, 지역주간지 22개, 월간지 5개, 뉴스통신 1개 등 모두 100개 매체가 선거기사 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지적돼 제재를 받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 매체 비율은 22.4%로 지역일간지(46%)와 중앙일간지(45.2%)가 높게 나타났다.

중앙일간지는 31개 자체심의대상 매체 중 14개 매체에 대해 경고 9건, 주의 6건, 권고 5건의 결정을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이 8건, 외부기고 1건이다.

지역일간지는 자체심의대상 100개 매체 가운데 46개 매체에 대해 92건을 결정했다. 결정 내용별로는 경고문 게재 6건, 경고 47건, 주의 33건, 권고 6건이고,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2건, 외부기고 2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8건, 광고제한 1건으로 나타났다.

종합주간지는 34개 자체심의 대상 매체 중 12개 매체에 대해 16건의 제재를 했다. 경고 11건 주의 4건 권고 1건이었으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7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6건, 외부기고 3건이다.

지역주간지와 교육주간지 심의대상 243종 중 22종에 대해 24건의 제재를 했다. 경고문게재 2건, 경고 17건, 주의 1건, 권고 4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4건, 외부기고 6건, 광고제한 3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1건으로 나타났다.

월간지는 5개 매체에 대해 7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종합월간지 4개, 지역월간지 1개이다. 경고 결정이 6건이었으며, 주의가 1건이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이었고 외부기고 위반이 1건이었다.

심의대상 매체 중 4회 이상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모두 7곳으로 대부분 후보자간 경합이 치열했던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일간지였다. 특히 인천일보는 총 5회 제재를 받았다.

매체별 위반현황

간 별	매체명	구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중 앙 일 간 지	국민일보	1		1						1	
	더데일리포커스	1	1								1
	데일리노컷뉴스	1	1								1
	데일리스포츠월드	2	2						1	1	
	동아일보	1		1						1	
	서울신문	2		1			1		2		
	세계일보	2		2					1		1
	스포츠동아	1	1								1
	조선일보	2	1	1					1	1	
	중앙일보	1		1					1		
	파이낸셜뉴스	3	3						1	1	1
	한겨레	1		1					1		
	헤럴드경제	1	1							1	
	evening	1	1						1		
	소 계	20	11	8			1		9	6	5
지 역 일 간 지	강원도민일보	2					2		2		
	강원일보	1					1		1		
	경기신문	2	2							1	1
	경인종합일보	2	2							2	
	광남일보	1		1						1	
	광주일보	2	1				1		1	1	
	경북일보	2		1			1		1	1	
	기호일보	1	1								1
	내외일보	2	2					1	1		
	대구일보	1				1			1		
	대전일보	2	1				1		1	1	
	대한매일신문	2	2						2		
	대한투데이	1	1							1	
	동국일보	2	1				1		1		1

구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 별	매체명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지 역 간 지	매일신문	1	1						1		
	새만금일보	4	2	1			1		1	2	1
	새전북신문	1					1		1		
	수도권일보	2	2						1	1	
	수도일보	1	1						1		
	시민일보	2	1				1		1	1	
	아시아경제	1	1							1	
	아시아일보	3	3						1	2	
	아시아투데이	1	1								1
	아주경제	2		2					2		
	영남일보	1					1				1
	우리일보	4	3				1	1	1	2	
	인천신문	2					2		1	1	
	인천일보	5	1				4		4	1	
	일간전북타임스	1	1							1	
	전광일보	1	1						1		
	전국매일	3	3							3	
	전남매일	1	1						1		
	전남일보	1		1						1	
	전라일보	1	1						1		
	전북일보	1	1							1	
	전주일보	4	4						2	2	
	중도일보	3	3						1	2	
	중부일보	4	4						2	2	
	중앙매일	4	4						4		
	충남일보	1	1						1		
	충북일보	2	1				1		1	1	
	충청일보	4	2	2				1	3		
	충청투데이	3	1				2		3		
	현대일보	1	1							1	
	호남매일	1	1					1			
	호남신문	3	3					2	1		
	소 계		92	62	8		1	21	6	47	33

간 별	매체명	구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종 합 주 간 지	뉴스포스트	1	1						1		
	민주신문	1		1					1		
	사건의내막	1		1					1		
	시사뉴스	1	1							1	
	시사신문	2					2		2		
	시새IN	1	1						1		
	시사저널	1	1								1
	시사포커스	2	1				1		2		
	월요신문	1		1						1	
	위클리경향	1		1						1	
	일요서울	3	2	1					2	1	
	주간조선	1		1					1		
	소 계	16	7	6			3		11	4	1
지 역 주 간 지	주간 강남내일신문	1	1						1		
	강남포스트	1					1		1		
	강원리뷰	1	1								1
	강진고을신문	1	1					1			
	거창군민신문	1				1			1		
	거창신보	1				1			1		
	경기헤럴드	1					1		1		
	교육연합신문	1	1						1		
	김천문화신문	1	1						1		
	나주투데이	1	1					1			
	마포타임즈	1	1						1		
	미래교육신문	1	1								1
	밀양사람들	1		1					1		
	서경신문	1	1						1		
	서해안신문	1	1								1
	성북신문	1					1		1		
	종로저널	1	1						1		
	주간 시정신문	2	1				1		1		1

간 별	매체명	구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 결과 보고금지	광고 제한	외부기고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지 간 지	주간함양	1	1							1	
	중구신문	1					1		1		
	중구자치신문	1					1		1		
	한국시사	2	1			1			2		
	소 계	24	14	1		3	6	2	17	1	4
월 간 지	경제풍월	1	1							1	
	뉴스저널	1	1						1		
	시사매거진	2	2						2		
	여수여수사람들	1					1		1		
	월간중앙	2	2						2		
	소 계	7	6				1		6	1	
뉴스 통신	연합뉴스	1		1					1		
	소 계	1		1					1		
총 계		160	100	24		4	32	8	91	45	16
		100.0%	62.5%	15.0%		2.5%	20.0%	5.0%	56.9%	28.1%	10.0%

가. 중앙일간지

제재를 받은 14개 중앙일간지를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지 7개, 경제지 2개, 스포츠지 2개, 무료지 3개로 나타났다. 종합지는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가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고,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가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경제지는 파이낸셜뉴스가 3건, 헤럴드경제가 1건 제재를 받았다. 스포츠지는 데일리스포츠월드가 2건, 스포츠동아가 1건이고, 무료지는 더데일리포커스, 데일리노컷뉴스, evening이 각각 1건씩 제재를 받았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55%),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8건(40%)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경우 대부분 인물부각(10건)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 중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다른 매체 유형보다 많았는데, 특히 종합일간지의 경우 총 9건 중 8건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았다. 이는 전국 선거판세 분석 기사에서 판세분석의 근거가 되는 타 언론사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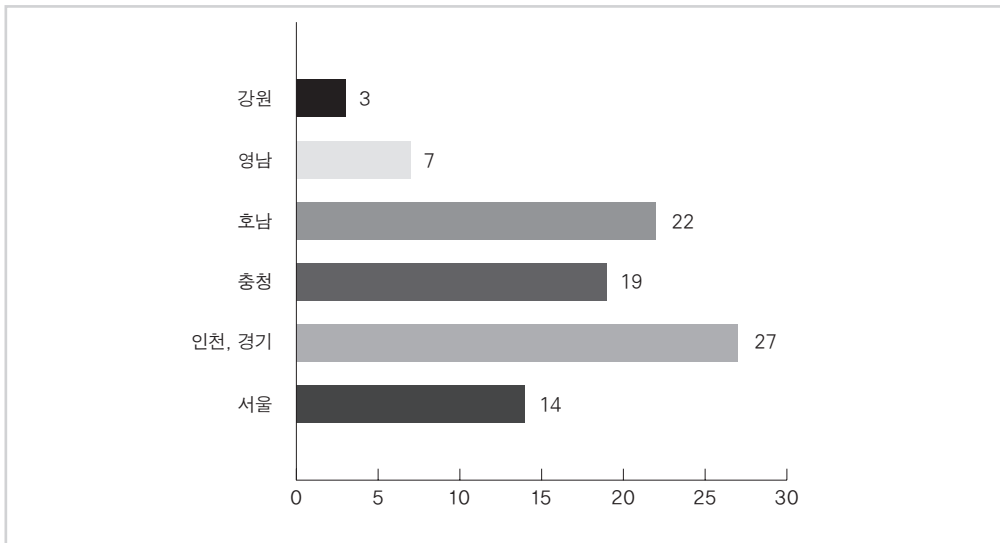
결정내용별로는 경고가 9건, 주의 6건, 권고가 5건이다. 종합일간지는 경고 6건, 주의 3건, 권고 1건으로 나타났고, 경제지는 경고 1건, 주의 2건, 권고 1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선거 초반에는 인물부각에 대한 제재가 많다가 선거에 임박할수록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았다. 경고 조치를 받은 건수 중 5건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다.

나. 지역일간지

지역일간지는 100개 심의대상 매체 중 46%인 46개 매체가 92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2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부기고 위반 21건(21%),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8건(8%), 광고제한 위반 1건(1%)순이었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 47건(47%), 주의 33건(33%), 권고 6건(6%), 경고문게재 6건(6%)이었다.

발간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역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지역 22건, 충청지역 19건, 서울지역 14건, 영남지역 7건, 강원지역 3건으로 나타났다. 후보간 경합이 치열했던 수도권과 충청지역, 매체수가 많은 호남지역의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간지역별 위반현황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발간되는 지역일간지의 경우 제재를 받은 41건(서울 14건, 인천·경기 27건) 중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31건(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지역 일간지(16건, 72.8%)와 충청지역 일간지(13건, 68.4%)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반면, 강원지역 일간지의 경우 3건 모두 외부기고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영남지역 일간지는 외부기고 위반이 3건(42.8%)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문게재 결정을 받은 지역일간지는 내외일보, 우리일보, 충청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이다. 내외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은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 보도해 경고문게재 결정을 받았으며, 충청일보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판세분석을 왜곡해 제재를 받았다. 우리일보는 선거 직전 특정 후보자의 논평을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다. 종합주간지, 지역주간지

종합주간지는 심의대상 34개 매체 중 12개 매체가 16건의 지적을 받았다. 시사주간지와 시사주간신문이 각각 6개 매체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가 6건, 외부기고 위반이 3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사례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경고 11건, 주의 4건, 권고 1건의 결정을 내렸다.

특히 다른 매체 유형과는 달리 여론조사 보도 요건 미비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많았다. 선거 판세 분석을 하면서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이다. 위클리경향과 주간조선은 도지사 선거관련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세 분석 기사를 게재했으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민주신문, 월요신문, 일요서울, 사건의 내막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특정 후보만을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해 제재를 받은 종합주간지는 시사IN, 시사뉴스,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뉴스포스트, 일요서울 등이다. 시사신문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칼럼을 게재해 제재를 받았다.

지역주간지의 경우 심의대상 230개 매체 중 20개 매체, 22건에 대해 제재를 했으며, 교육주간지 심의대상 13개 매체 중 2개 매체에 대해 2건의 제재를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위반사례들에 대해 경고문게재 2건, 경고 17건, 주의 1건 권고 4건의 결정을 내렸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4건, 외부기고 위반이 6건, 광고제한 위반이 3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1건이었다.

지역주간지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 지역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영남 8

건이었으며 경기, 충청, 강원 지역이 각 1건이었다. 호남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주간지 중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나주투데이와 강진고을이었으며, 두 매체 모두 특정 후보자를 수차례 부각보도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영남지역 주간지의 경우, 거창지역 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보, 한국시사에 대해 광고제한 위반으로 경고 결정을 했으며, 특정 거창시장 후보를 부각보도한 서경신문과 한국시사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내렸다.

라. 월간지, 뉴스통신

월간지는 종합월간지 8종, 여성지 6종, 지역월간지 16종, 교육월간지 6종 등 총 36종에 대해 심의를 했다. 이 중 월간지 5종에 대해 제재를 했으며, 종합월간지 4종, 지역월간지 1종에 대해 7건의 결정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 외부기고 위반이 1건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의 경력이나 인생관, 정치적 소신과 향후 포부 등을 다룬 특집기사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역월간지인 여수여수사람들은 후보자의 칼럼을 같은 호에 두 차례 게재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월간중앙은 5월호와 6월호에 각각 광진군수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통신사 중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는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판세분석 기사를 게재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III. 시정요구심의 · 의결 현황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는 총 18건이다. 처리결과별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2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2건, 경고문 게재 결정 4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4건, 권고 1건, 기각 4건, 각하 1건이다. 재심청구는 4건이었으며 기각 2건, 인용 2건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7건, 지역주간지 8건, 월간지와 뉴스통신이 각각 1건이다. 시정요구인 현황을 살펴보면, 도지사 후보 1건, 교육감 후보 1건, 시장 후보 6건, 구청장 후보 4건, 군수 후보 5건, 시의원후보 1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건, 경기와 인천 각 1건, 충청 6건, 호남 2건, 영남 5건, 제주 1건이다.

1. 정정보도문 게재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2건이다. 보령시장에 출마한 임 세빈 후보가 보령지역 주간지인 ‘주간보령’과 ‘보령시민신문’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주간보령은 임 후보를 시의원 후보로 잘못 기재했으며, 보령시민신문은 후보자의 출마기호를 잘못 기재했다. 해당 언론사는 편집 실수로 발생했다는 의견진술을 했으며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이후 바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2.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구로오늘신문은 2010년 4월 10일자 1면과 3면에 양대웅 구로구청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 기사를 게재했다. 양 구청장의 친동생이 소유한 골프클럽에 대해 세금징수를 해주고 골프클럽 주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 구청장은 시정요구서를 통해 징수유예를 해준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것이며 골프클럽 부지의 용도가 변경된 바가 없다며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대상 기사에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시정요구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감안해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양 구청장의 친동생 소유 골프클럽 부지가 용도변경이 된 바 없음에도 부제목에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적시한 것은 바로 잡아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일간대구경북은 2010년 5월 10일자 3면 “영천지역 비례대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영천시의회 여성비례대표 1번으로 전묘순씨가 확정되자 영천지역 대부분 단체들과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4년 전 비례대표 내정시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씨가 적절하지 않다고 알린 바 있고, 전씨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문제상담소가 문을 열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자신이 비례대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한 바 없으며, 4년 전 본인에 대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없고, 가정문제상담소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4년 전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시정요구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시정요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정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가정문제상담소 운영에 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만을 근거로 기사화한 반면,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3. 경고문 게재

시정요구에 대한 경고문 게재 결정은 4건으로 지역주간지가 3건, 뉴스통신이 1건이다. 시정요구인은 도지사 후보 1건, 교육감 후보 1건, 군수 후보 2건이다.

함안지역 주간신문인 THE함안신문은 2010년 2월 12일자, 26일자, 3월 11일자에 6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예정자의 출마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편향된 기사와 인터뷰를 게재했다. 이는 특정 후보예정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시정요구인인 현 함안군수를 비롯한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시정요구인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청구 이유도 없고 재심청구 취지도 타당하지 않아 기각했다.

제주지역 주간신문인 제주프레스는 2010년 3월 31일 1면, 2면 “선거 시작 전 ‘엄포’로 정면돌파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보도했고,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 현명관 후보는 위 보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인의 사생활 관련 소문을 충분한 사실확인 과정없이 보도한 것은 시정요구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피시정요구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이유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지역주간지인 진천군민신문은 2010년 5월 27일자 1면, 2면, 3면, 4면, 5면, 7면에 걸쳐 민주당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가 자신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 내용과 진천군의 각종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들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연합 진천군수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위 기사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천군 사업 관련 기사는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이유도 없고 피시정요구대상 매체가 격주간 발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보도의 시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통신사인 뉴시스는 2010년 4월 20일자 “교육감 선거 진흙탕 싸움되나…오근량 후보 논문 표절 주장 우편물 언론에 배달” 제하의 기사에서 오근량 후보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언론에 배달되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

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근량 시정요구인은 음해성 투서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과문 게재와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제보자가 확실하지 않은 우편물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것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개연성이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정에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4. 반론보도문 게재

시정요구에 대한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4건으로 모두 지역일간지에 대해 내려졌다. 시정요구인 유형별로는 시장 후보 2건, 구청장 및 군수 후보 각 1건이다. 시장 후보 2명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요구한 것이다.

한남일보는 2010년 3월 2일자 7면 “함양군수 출마자 ‘사업비 악용’ 시끌” 제하의 기사에서 경상남도가 함양군에 배정한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모 전 국장이 자신의 측근에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위 사업과 관련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정정보도 게재를 인용할 수 없지만 시정요구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대전일보는 2010년 4월 7일자 18면 “우건도, 고급빌라 구설수” 제하의 기사에서 우건도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충주부시장 재임시 시가보다 싸게 고급빌라를 매입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건도 후보는 시정요구 대상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대상 기사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충분한 반론과 해명이 미흡한 점을 고려,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인천일보는 2010년 4월 27일자 3면 “한나라 이홍수 애도현장 기념사진 빈축”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인천 동구청장 이홍수 후보가 천안함 순직 장병 조문을 다녀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단체 기념사진을 첨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 이에 대해 이홍수 후보는 사진은 조문과 무관하고 선거에 홍보할 목적은 없다며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사 사진 배경이 제2연평해전 전적비임에도 제목에서 애도현장이라고 적시해 마치 빈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는 점 등을 감안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동양일보는 2010년 5월 14일자 3면 “김호복 후보 수사 급물살 검찰, 계좌 등 압수 수색” 제하의 기사에서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BTL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인 모 기업으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과장 기사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부분은 시정요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정정보도 게재 결정은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인이 관할 경찰서에 수차례 확인한 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피시정요구인은 원심대상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어 반론보도문 게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 심의위원회는 피시정요구인의 주장 일부를 수용해 반론보도문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결정했다.

5. 기각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기각 결정은 4건이다.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지역월간지 각각 1건이다. 구청장 후보와 군수 후보가 각각 2건을 시정요구 했다.

한겨레 2010년 3월 11일자 4면 한나라당 고위관계자가 도봉과 서초, 광진, 강북구청장은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는 “한나라, 서울 구청장 반 이상 물갈이”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정요구대상 보도가 특정 정당의 선거전략 등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전남지역주간지인 함평천지신문 2010년 3월 30일자 1면 “김성호 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김성호 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가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김 후보가 공천심사에서 배제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김 후보의 재심신청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후속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으나, 함평천지신문은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김 후보가 후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해 원심 결정을 이행할 이유가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시정요구인의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했다.

매일신문은 2010년 3월 23일자 3면에서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인 김부기 후보의 직책을 이명박 대선후보 직능 특보라고 보도했으나, 김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후보 경선 직능특보 경력을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된 후 매일신문 4월 13일자 4면에 시정요구인의 경력을 바로 잡는 정정보도가 게재됐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홍성신문은 2010년 5월 10일자 4면 “민주당-야4당 군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결렬” 제하의 기사에서 김용일 민주당 홍성군수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후보단일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 요구도 수용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측의 입장과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시정요구대상 기사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실상 결렬’이라는 표현은 언론의 의견표명으로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했다.

